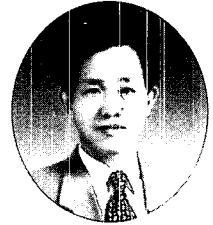


IMF체제하의 폐기물 관리정책



신 현 국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

1. '98 폐기물관리 여건과 전망

'97년에는 소각시설의 다이옥신문제, 매립지 침출수 문제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관리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들의 호응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처리에서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범정부적으로 쓰레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도 병행·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재활용분야에 있어서는 '97년에 재활용품 적체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98년에도 IMF체제하에서의 산업전반에 대한 투자의 위축과 경기침체에 따라 영세재활용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지정폐기물 공

공처리장에 대한 주민반대로 시설확충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시설부족에 따른 장거리운송처리등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더욱이 '9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따른 영향으로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쉽지 아니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근검·절약의식이 확산되고 있어, 재활용촉진이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와 같은 자원절약형 환경보전 시책이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실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쓰레기종량제의 효과로 생활폐기물은 감소하였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최근 3년간 평균 1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율은 55%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68%이상을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활용율은 비교적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율이 66.3%의

〈표 1〉 폐기물 발생량 추이

(톤/일)

구 분		'94	'95	'96
생활폐기물	계	58,118	47,774	49,925
	버리는 쓰레기	49,191	36,468	36,840
	재활용품	8,927	11,306	13,085
사업장 폐기물	계	88,931	100,267	130,648
	일반	85,229	85,823	125,409
	지정	3,702	4,444	5,239

〈표 2〉 폐기물의 처리실태

(%)

구 분		'94	'95	'96
계	재활용	42.7	48.9	54.9
	소각	4.1	5.3	5.3
	매립	53.2	45.8	39.8
생활폐기물	재활용	15.8	23.7	26.2
	소각	3.5	4.0	5.5
	매립	80.7	72.3	68.3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61.2	61.5	66.3
	소각	4.6	5.9	5.2
	매립	34.2	32.6	28.5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매립·소각은 각각 28.5%, 5.2%를 나타내고 있다.

3. '98년 폐기물관리 정책방향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서 2001년까지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율을 35%, 소각처리율을 20%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율 68%, 소각처리율 12%, 매립처리율 20%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98년에는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율은 28%, 소각처리율은 8%로 각각 끌어 올리고 매립처리율은 64%로 다소 낮추는 것으로 폐기물관리 목표를 설정하였다.

폐기물관리 정책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98년 주요정책방향을 첫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의 역점추진 둘째, 폐기물의 안전처리 기반 확보 셋째,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 기반구축 넷째, 쓰레기증량제 보완등 관련제도 개선 다섯째, 쓰레기 투기근절등의 다섯가지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4. '98년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계획

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촉진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좋은식단제를 확대시행하고, 모범음식점을 활성화하는 한편 '98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62

천개소에 달하는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의무이행 실태를 중점점검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K마크)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등 감량화·퇴비화기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감량화기기의 공동설치 등 감량기기설치로 인한 대상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시·군·구 및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처와 수요처를 연계·알선하는등 사료화·퇴비화제품의 수요 확대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97년 9개시설에서 '98년에는 20개시설로 확대하고,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100억원을 지원하여 민간음식물쓰레기 전문재활용업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아 축산농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에서는『음식안남기기』, 음식점에서는『남은음식 싸주기』, 집단급식소는『잔반통 없애기』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로『음식낭비 않기』법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예식등 주요 행사시『음식물 제공안하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대책의 추진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적용대상 14개

업종별로 폐기물 최소화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합성수지 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부여하여 '98년부터 단계적으로 그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30대 기업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지양하는 대신 자체처리 또는 그룹사간의 공동처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리필제품 생산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리필 대상품목도 삼푸·린스등 두발용제품을 추가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등 36만개소에 달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다. 재활용 활성화 대책의 추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97년의 450억원에서 '98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규모 재활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등 4대 권역별로 재활용제품 판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제품의 공동판매, 홍보, 유통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재활용제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환경친화기업, 상장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하여도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제품의 적체 해소를 위하여 폐플라스틱은 제철소 용광로 또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활용하고, 폐유리병을 건축단열재, 도로포장용 골재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조달청 비축자금을 300억원규모로 확대하고 권역별 재활용제품의 비축기지 조성사업을 조기완료하여 재활용제품의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에 관한 법적절차를 간소화하고, 폐컴퓨터의 재활용 촉진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쓰레기 분리수거기능을 강화하고, 대형사무실, 공원등 다중이용시설에 분리수거함 설치

를 의무화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폐지·고철의 분리수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2월을 『재활용품 집중수거기간』으로 설정하여 종이·병·캔 등을 집중수거할 계획이다.

IMF시대의 자원절약형 소비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고물품의 교환·전수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중고물품의 교환·전수운동을 자치단체, 각급 학교등과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중고가전제품의 재활용센터를 현재 103개소에서 150개소까지 확대하여 『고쳐서 다시쓰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읍·면·동별로 재활용코너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중고품 매매시장 개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의 여건변화와 IMF시대하에서의 재활용 인식변화를 반영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제품생산자 및 소비자 책임의 명확한 분담과, 폐가전제품등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폐기물을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는 『통합재활용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쓰레기종량제의 개선·보완

쓰레기종량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제기된바 있는 봉투재질문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개선·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0% 분해성수지 함유봉투의 사용을 금년 상반기중 서울·경기지역의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완료시까지 매립지역에서는 전분 9% 함유봉투, 소각지역에서는 탄산칼슘 함유봉투 사용을 확대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작년에 94개 시·군·구에서 실시한 1일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종량제가 감량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중에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폐형광등, 폐건전지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별도 수거·처리체계 구축등 적

정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합성수지 재질의 원료값 인상과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종량제 봉투값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IMF체제 하의 어려운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상자체를 유도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종량제봉투의 상업광고를 적극 유치하여 충당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시가지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 입구 등에 간이쓰레기통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시가지의 청결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시 현행 5종으로 되어 있는 분리배출 재활용품목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는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며, 전국 시·군·구별로 상습투기지역을 선정하여 종량제 봉투사용 미이행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량제이행 실태평가제를 도입하는등 쓰레기종량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마.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및 안전성 확보

매립·소각시설등 생활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8년중 도시형 종합처리시설 5개소, 매립시설 24개소, 소각시설 32개소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6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도권외의 화성, 영남권의 창원등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신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온산사업소 잔여 부지의 매립시설과 호남권 군산의 1일 6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입수수료에 의한 주민지원금의 일정액을 사업초년도에 일시지급하고 시설설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의 20%를 환경개선 사업비로 특별지원하는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의 시설개선 및 신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별 다이옥신 규제기준치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고, 소각잔재의 적정 처리방안 강구등 선진국 수준의 쓰레기 소각로의 다이옥신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한다.

소형 소각시설의 운영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불량시설은 폐쇄하고 신규시설의 설치를 억제하는등

소각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소각방식인 플라즈마용융 소각시설을 화성에 시간당 2톤 규모로 시범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정밀조사후 불량매립지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실 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설계·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책임감리 대상시설을 확대하며, 매립시설의 표준시방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학계·업계등 전문가 50명으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해마다 국립공원·해수욕장등 주요 행락지가 무질서한 쓰레기투기등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97.8월에는 정부가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추석절·가을행락철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는 지속적인 단속과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금년에는 공원·도로·산림등 쓰레기투기 취약지역을 『쓰레기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투기감시 공익근무요원을 증원·배치하고, 명절·피서철·행락철을 『쓰레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련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쓰레기 투기근절을 단순한 단속과 적발차원을 넘어 우리의 자랑스런 국토를 보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국토사랑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